

경찰, '법원 폭동' 66명 구속영장... "엄정 사법처리"

유튜버 3명 포함 90명 체포
현행범 51% 20~30대 차지
이호영 "재발방지대책 마련"
대법 "가담자 전원 손해 청구"



이호영(오른쪽)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법에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행범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41%(19명)

를 차지했다. 10대도 1명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대 1명 △20대 6명 △30대 19명 △40대 6명 △50대 11명 △60대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다른 불법 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동 점거 사태 당시 경찰은 부족한 인력으로 원천에 따라 최선의 대응에 나섰

다"고 강조했다.

다만 폭동 당시 경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존재했던 만큼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경찰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해오고 있고, 불법 폭력에는 엄정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폭동 사태 당시 경찰이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주관단체를 불문하고 (불법 집회에) 엄정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경찰의 초동 대응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경찰 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12월3일 이후 계속 밤샘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침탈당한 건 처음"이라

며 "그 상황에서 과격하게 폭동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직원들이 다친 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찰 전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상황을 보면 시위 참가자가 3만5000명, 경찰이 3000명이었다. 3만5000명의 집회시위 관리는 3000명으로 버겁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이 5000명 정도인데, 그 당시 광화문에서도 3만명 규모 집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당시 서부지법 인근 집회 규모는 3만5000명에서 1300명으로 약 95% 줄었고, 이와 함께 현장 배치 기동대는 3000명에서 900명으로 약 70% 줄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고 질문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님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느냐"는 질문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에게 대해 얘기하는거 같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이어 '체포되고 수사받는 사람에게 청구하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뉴시스

"극우·보수 유튜버들, 계엄 후 수입 2배 늘어"

정일영, 순위집계 플랫폼 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의 수입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글로벌 유튜브 채널 순위집계 플랫폼 '플레이보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후원금) 수입 순위 상위 7개 채널 중 6개의 지난해 12월 수익이 전월 대비 평균 2.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중 최다 구독자(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 2500만원으로,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늘었다.

5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B채널은 같은 기간 2034만원에서 4684만원으로

2.3배 늘었으며, 유튜버 C와 D도 각각 2.1배 확대됐다.

특히 34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E채널은 지난해 11월 868만원에서 12월 2187만원으로 한달새 수입이 2.5배 폭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눈길을 끄는 점은 슈퍼챗(후원금) 수입 순위 상위 7개 채널 모두 슈퍼챗 수입과 함께 별도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중 5개 채널은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후원금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일영 의원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이 허위정보와 무분별한 혐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신고 및 과세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제적인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부지법 직원들, 재판기·의자로 '난동' 저지

경과보고서에 당시 상황 담겨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자 법원 직원들이 재판기와 의자 등으로 폭동을 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19일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19일 새벽 당직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 직후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 인계를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하고, 2시59분께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시됐다. 언론 보도는 3시께 이뤄졌다. 이후 3시7분께 법원 인근에서 시

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경찰 저지선을 뚫었다.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 3시21분께 지지자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법원의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져 법원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오전 3시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법원 직원들은 최초로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려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옥상에 모인 24~25명의 직원은 출입문을 의자에 대고 침입에 대비했다. 약 1시간 뒤 경찰이 청사 내 시위대를 모두 퇴거시켰다.

다만 법원 직원들은 2차 침입에 대비해 전력 차단이 가능한 설비실로 이동해 청사 밖 시위대의 안정을 기다렸다.

오전 5시15분께 청사 내 시위대가 모두 퇴출당했다. 다만 일부는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오전 7시28분께 청사 외부 시위대가 대부분 해산, 일부 시위자가 법원 청사와 떨어진 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직실 유리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자 당직실을 포함한 법원 근무 직원들은 옥상으로 긴급 대피해 직접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지자들의 침입을 제지하거나, 대피하는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경찰,尹 안가 압수수색 또 무산... 경호처, 집행불능사유서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폐쇄회로(CC)TV와 계엄문건 확보를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또다시 무산됐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10분께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며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

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20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간은 지난번과 같이 '일몰 전까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안가 내·외부 CCTV와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차원으로, 관련 자료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뉴시스

"尹 지지자 법원 난동에 6~7억 물적피해 발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밝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주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7억 원가량의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오전에 진행된 대법관 회의 결과를 말했다.

천 처장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진입 당시)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법원 직원은 없으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적 측면으로 현재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의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 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 피해가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천 처장은 "(시위대가) 소화기를 던져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청사 7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선(판사실 위치를)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